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

또 다시 침묵하는 방통위와 사업자에게 묻는다

1천 3백만 경기도민은 2년이 넘도록 주파수 99.9MHz의 노이즈만을 듣고 있다. 작년 1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모에 7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낸 이후 두 달이 지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일 공모 절차를 시작하며 올해 1월 중 선정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 일정, 사업자 선정 발표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혀온 방통위가 왜 경기지역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일정은 내놓지 못 하는지 의문이다. 심사 일정에 대한 설명 책임은 7개 신청사업자가 아니라 1천 3백만 경기도민에 대한 의무이다. 방통위는 심사 지연의 이유와 후속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 지부와 이 자리에 함께한 경기지역 노동사회단체는 이번 심사에 지원한 7개 사업자에게 다음 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지역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주체는 노동자와 시민이다. 사업신청서에 적은 ‘인력 운용 계획’에 2년 넘게 새로운 방송을 기다리며 지역 저널리즘과 공론장의 마련을 준비해 온 노동자에 대한 채용 계획과 방식을 밝혀라.

둘째, 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 개시 일정을 명확히 하라. 공개된 사업계획서에 (구)경기방송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 조속한 개국을 서두르겠다는 사업자들이 있었다. 경기도민의 시청권 회복이 시급하지만 충분한 투자 여력도 없는 사업자의 출속 개국을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셋째, 지역 지상파 라디오방송으로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전략을 밝혀라. 일부 신청사업자에게는 과거 경기방송이 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적폐를 연장할 사업계획마저 엿보인다. 우리는 시주의 지위와 위신을 위한 노동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방통위에도 요구한다. 위 세 질문은 지역 언론이 극복해야 할 오랜 과제다. 사업자가 신청서의 화려한 문구와 숫자 뒤로 숨어 침묵할 질문을 과감히 제기하라. 심사항목 배점이 아니라 신청사업자 사주가 직접 대답할 지역언론 개혁의 시발점을 엄정히 심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18일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